월/요/광/장

이 원 일

명품도시 광주

지난주에 필자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최고의 전시행사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스위스의 바젤 아트페어를 관람하고 돌아왔다.

두 행사는 세계첨단미술의 최신동향과 흐름을 비엔날레라는 학술적 형태와 아트페어라는 미술시장의 성격으로 구분 짓게 하면서도 동시에 유럽 내 두 도시 간의 지리적 근접성과 연계성, 관광 상품성, 그리고 행사 조직위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에 의해 전 세계미술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 그리고 6월의 유럽 관광객들에게 필수 답사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두 '명품' 도시의 명품 행사들이 빚어내고 있는 상호 시너지의 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이 두 나라, 두 도시의 파워풀한 랑데부가 세계인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필자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다.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닥쳐 전 세계가 경제대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미술관에서도 예정됐던 전시 취소 및 연기 사태가 속출했고, 세계 미술시장도 꽁꽁 얼어붙게 된 상황이어서 올해의 베니스와 바젤 행사는 더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베니스 노후화론'자들에게는 내심 이번 행사가 최근의 전 지구적 경제 불황의 여파에 의한 최악의 이벤트로 전락해 자신들의 왜곡된 믿음이 사실로 둔갑, 증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쯤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해의 두 행사는 그러한 우려를 기획자, 조직위원회의 탁월한 능력과 실력으로 불식시키고, 세계인이 다시 한 번 두 도시의 저력을 실감하게 한 채 대성공작으로 순항중이다. 이것이 역사와 전통, 생산품의 질로 인정받아 부동의 위치와 신분을 획득한 소위 명품의 위력이다.

마침 필자가 소속되어있는 스위스 문화재단의 갈라 디너파티가 베니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최되어 그 자리에 초대된 세계미술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번 행사의 성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탈리아의 또 다른 명품도시인 밀라노에 들러 올해 개최될 전시협의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했다.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된 두오모 성당을 보유한 도시이자 프라다, 구치, 베르사체 등 말 그대로 '명품 브랜드' 들이 즐비한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출발하여 전 세계 여행객들의 허브인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우리의 도시들이 베니스, 바젤, 밀라노, 프랑크푸르트와 교차되었다. 그리고 독일 비행기는 지구 반대편을 날아 필자가 태어나고 성장한 한국 땅에 필자를 내려 주고 떠났다.

이미 수백 번 왕복한 거리요, 도시들이요, 공항들이지만 이번에 다시 내린 인천공항과, 공항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새삼스럽게 필자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문구가 있었다.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 '아시안 하이웨이(언젠가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슬그머니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리고 필자의 거주지 용인의 초입부에 걸려 있는 '세계최고, 선진도시 용인'이 그 문구들이다. 우리 자신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세계인 중 몇 사람이 이 '낯 뜨거운' 문구들에 동의하고 공감할 것인가라는 자문이 가슴을 옥죄어오는 자괴감의 핵심인 것이다.

세상에는 세계인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팩트'(fact)라 부른다. 광주라는 도시가 공허한 정치적 구호의 남발이나, 행사 관람객동원의 쇼비니즘적 숫자놀음이 성공의 등식이라는 '억지로 하이웨이'의 자가 최면의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팩트'라는 부동의 위성궤도에 진입하여 세계인이 찾고, 세계인들에게 인정되고, 공감을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한국인, 그리고 광주시민에겐 지리, 정치, 문화,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우리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팩트부터 인정하고 우리만의 '결단'과 '시술' 그리고 '의식'의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세계성이라는 '대기권 밖'의 궤도에 진입하는 위성으로서의 명품도시 광주를 전 세계인의 머리 위로 회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 BSI 재단 상임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 상 훈

有口勿言(유구물언) 강요사회

어느 국세청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당국의 파면 근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요, 고발의 혐의는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과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이른바 '촛불 정국'의 끝자락에 세무조사 정국이 시작된 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후원자로 알려진 점, 태광실업은 경남 김해에 본점을 둔 재계 600위권 기업에 불과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조직 수뇌부에게 바라는 바는 도덕성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였다. 그의 충직한 요구와 바람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혹자는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탓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당국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맥락을 무시하고 字句(자구)에 천착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여 핵심을 놓치는 수가 많다. 공무원에게서 직업과 명예감을 박탈하려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비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 같은 동료만이 열람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란에 그저 한마디 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그의 기조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조직의 거듭남을 강조했다.

백보 양보해서 그가 사용한 말들이 공무원의 품위에 미치지 못했다고 치자. 그의 어법이 거칠거나 저속해 마땅한 품위에 함량미달이라면, 동료 독자들로부터 방치되고 무시됨으로써 그 값을 받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를 파면하고 고발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수차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국세청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로 그쳤다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징계재량권은 균형을 잃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有口無言·유구무언)는 것과, '입이 있더라도 말하지 말라'(有口勿言·유구물언)는 것은 대단한 차이이다. 전자는 반성이지만, 후자는 폭력이다. 有口勿言(유구물언)을 강요하는 조직, 필경 역사 앞에 有口無言(유구무언)할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 고

전 완 준

만연천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맹인 가수 이용복씨가 불렀던 '어린 시절'이란 추억의 가요 한 대목이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장구치고 가재 잡던 추억을 떠올리면 저절로 그 얼굴에 햇살이… 그러나 그러한 곳은 어느 한구석도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화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01년에 개봉돼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 '친구'는 처음 도입부에 어린 아이들 네 명이 천진하게 물놀이를 하며 노는 장면으로 시작해, 마지막 부분에 처음 나왔던 물놀이 하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추억을 더듬으며 여운을 남긴다.

화순군은 물고기가 살고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추억의 명소를 복원, 군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오늘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께서 가재를 잡고 미역을 감으며 어설픈 개헤엄을 치고 즐거워 했던 바로 그 마음의 안식처를 복원, 단절된 세대를 연결해 주는 가교의 한 마당으로 가꿀 계획이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장구치고 가재 잡던 추억은 평생 동안 우리 뇌리에 남아있다. 특히 요즘처럼 삶이 메마르고 힘들 때 기쁨을 느꼈던 장면으로 되돌아가서 즐거웠던 그때 느낌을 생생하게 다시 느껴 보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요즘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 빠져있어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자연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는 냇가를 살려 꿈을 키우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화순읍의 터전은 뒤로는 만연산이요, 앞으로는 화순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명당이다. 시내를 흐르고 있는 만연천은 만연산에서 발원, 실개천을 따라 화순천, 지석천을 지나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에 합류한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기 위해선 실개천이나 샛강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한다고 본다.

샛강도 살리고 추억도 살리고… 만연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날 화순 군민들은 아득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의 설렘으로 가득 찰 것으로 본다. 지난날의 즐거운 회상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만연천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은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선사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람은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만연천에서 다시 가재를 잡게 될 때 화순 군민들은 추억의 신비감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화순군수〉

사 설

비과세·조세감면 축소·폐지 부당하다

정부가 '비과세·조세감면제의 대폭 축소 및 폐지'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폭이 커진 것을 메우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조세감면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제의 혜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6개 조세 감면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꼽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대부분의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민과 중소기업, 농민 등 취약계층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현재 비과세·감면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만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축소나 폐지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이 입을 타격은 너무 크다.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비과세·조세감면제를 폐지·축소하겠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세수가 감소해 재정의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과표 8천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다시 환원하면 된다. 또한 MB 정부 들어 크게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자 및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는 길일 것이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주면서 그 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우겠다는 발상은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 비과세·조세감면의 폐지·축소의 부당성은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반대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정부, 쌀 수급 안정위해 수매 적극 검토해야

최근들어 쌀값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풍작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어 창고마다 재고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쌀값이 오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쌀 재고량이 지난해에 비해 33%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산지 쌀값도 지난 6월 5일 현재 80kg당 15만89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가 하락했다.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투매조짐까지 있어 쌀값파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차원의 쌀 수급 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농협 쌀 재고량의 20% 이상을 당국이 수매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여건이 지속되면 올 수확기 쌀 수급불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전남도의 대책이 시름에 잠긴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선처'만 기다려서는 곤란하다. 쌀을 수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의 감소다. 실제로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2005년 80.7kg에 달했으나 2006년 78.8kg, 2007년 76.9kg, 2008년 75.8kg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74.3kg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쌀값 파동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남도의 수매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세워 농촌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정부의 수매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無 等 鼓

샛강 살리기

호남정맥 줄기인 담양군 용면 용추산의 가마골 용소(龍沼)에서 발원해 서남해로 흘러드는 영산강의 길이는 136㎞에 이른다. 유역면적(3천371㎢)은 전남도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훌쩍 넘는다. 남도의 생명들을 키우는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수계(水系)를 세분해보면 황룡강과 지석천을 비롯 하천법상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5개,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는 지방 1급 하천은 광주천 등 2개다. 특히 '샛강'에 해당되는 지방 2급 하천은 163개로, 영산강 전체 지류하천의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샛강은 수질이 극도로 악화돼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지경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그동안 본류 위주로 수질 개선 정책을 펴온 탓이다. 2001년부터 6년 동안 8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샛강이 오염돼 '생명수'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수중보 설치나 준설 등 본류 중심의 4대강 수질개선 대책을 비판하며 지천이나 상류 오염원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예산 낭비며, 수질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전남도가 영산강 수질개선과 유량 확보를 위해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것은 퍽 반가운 일이다. 도는 우선 본류와 직접 연결되는 큰 지천들을 대상으로 오염 경로 확인 및 오염원 배출 감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부터 펴고 있는 '샛강 살리기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했다. 영산강의 '윗물'을 살리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때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이동주유차 직접 주유 화재위험 크다

며칠 전 시내 변두리의 한 고물상 주변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고물상에서 철물을 분리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동용 기름 판매 차량이 다른 차에게 주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름판매를 위해 이런 이동차량이 다른 차에게 직접 주유를 하는 것은 자칫 커다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물며 바로 옆에서는 산소용접기로 불꽃을 튀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거대한 유류 탱크를 실은 유류차량이 도심 한복판에서 기름을 넣다가 사고를 낼 경우 대형 참사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유사 휘발유도 금지하는 것이다. 유사휘발유는 시너라는 발화물질을 섞는데 이것의 발화 능력이 워낙 뛰어나 손쉽게 불이 붙고 폭발력까지 커 주택가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식으로 팔고 사는데 이런 행위들이 주택가 대형 화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주변에는 각종 공사장과 산소용접기 사용, 인화물질이 널려있는 도심 아닌가. 이동주유차로부터 직접 주유할 경우 접지설비 미비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 유류로 인한 화재위험이 크므로 본인들의 안전의식은 물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진보라·목포시 복만동

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지난번에 멜라민 파동이 터졌었다. 식당에서 하는 원산지표시는 웬만큼 지켜진다고 해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음식은 여전히 원산지표시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다. 그동안 전부 다 국산 닭과 국산 돼지족발인줄만 알고 먹었는데 전부다 못 믿을 거라니 한숨이 나온다. 물론 수입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수입고기를 배달할 것이라면 소비자들에게 그게 국내산인지 수입고기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시중에 배달되고 있는 모든 육류제품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특히 치킨은 치킨집에서 먹는 것보다 대부분 배달이기 때문에 치킨포장에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옳다. 음식을 시켜먹는 횟수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정부는 하루빨리 배달음식에도 그 겉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